

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 제시 -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개최 -

- ❶ '미래대응기금'을 신설해 청년·성장동력·지방·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, 향후 재정안정화도 도모
- ❷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제성장률·학령인구 변동율을 적용해 개편하고, 영유아·고등교육·성인교육에 재투자

기획예산처(장관 박홍근)는 8월 21일(금)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**재정 운용전략협의회** 첫 회의를 열었다. 이 협의회는 나라 살림의 방향과 굵직한 재정 현안을 정부와 민간이 한자리에서 논의하고 조율하는 기구다. 기획예산처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, 안건과 관련된 장관들이 정부위원으로, 학계·시민사회·산업계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.

출범 후 첫 회의인 이날에는 교육부 장관, 행정안전부 차관 및 민간위원 14명이 머리를 맞댔다. 논의 주제는 요즘 가장 뜨거운 두 가지, ❶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❷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이었다.

왜 협의회를 만들었나? - “혼자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”

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요즘의 재정 현안은 얽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다고 진단했다. 그래서 여러 지혜를 모으는 ‘**협의**’와, 서로 다른 입장을 아우르는 ‘**조정**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.

정부만의 판단으로 답을 내지 않겠다는 뜻이다. 학계·시민사회·산업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해법을 찾아가는 ‘집단지성의 플랫폼’으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신설·운용하겠다는 것이 박 장관이 밝힌 출범 취지다.

① 미래대응기금 - 호황의 열매를 미래에 심는 공간

반도체 호황 덕분에 **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**이 생겼다. 내년에도 세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. 정부는 이 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로 했다. **미래대응기금**을 새로 만들어 추가세수를 차곡차곡 적립하고, 이를 **전략적 투자**와 **재정안정화**를 위한 플랫폼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.

먼저, 미래를 여는 네 곳에 집중 투자한다. 정부는 **잠재성장률** 반등의 핵심 축이 될 네 개 분야를 중점 투자 대상으로 골랐다. **청년**(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튼튼하게), **성장동력**(AI·첨단기술의 주도권을 확보), **지방**(어디서 살든 기회가 있도록), **교육·인재**(사람에 투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) 분야가 그것이다.

다음으로, **재정의 ‘저수지’ 역할을 한다**. 그동안 우리 재정에는 세수 변동성을 흡수해 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. 비가 많이 오면 그대로 흘려보내고, 가뭄이 들면 쓸 물이 없는 셈이었다. 수입이 늘면 더 쓰고, 줄면 덜 쓰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. 미래대응기금이 생기면 달라진다. **최근 10년 평균 추세치를 상회하는 내국세 수입**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. 세입이 둔화되는 시기에 그동안 적립해 둔 추가세수를 활용하여 **재정여력을 신속하게 보강**할 수 있다. 나라 살림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**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**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9월 초에 **'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**이다.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“이번 추가세수는 AI 대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실탄인 만큼,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.”며 “AI 본격 확산에 맞춰 국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향후 2~3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 수 있는 투자의 적기”라고 강조하면서 “미래대응기금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**‘대체불가 대한민국’**의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.”고 밝혔다.

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-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균형 잡힌 교육투자 확대

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교육재정 구조를 합리화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한다. 이번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·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·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그대로 이어가고, 그 위에 영유아, 고등·평생교육으로 투자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.

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연동돼 세수 변동에 따라 재정 규모가 크게 오르내리고, 급감하는 학령인구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*가 지적되어 왔다. 특히 교부금 변동성으로 인해 시·도교육청이 중·장기 투자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돼 왔다. 또한, 초·중등 대비 투자가 부족한 영유아, 고등·평생교육 등을 고려하여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**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. 한편,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고, 인공지능 교육 전환 등 급증하는 미래교육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.

* 학령인구(만3~17세) 추이: ('10) 880만명 → ('25) 591만명 (△288만명, △32.8%)

교부금 규모 추이: ('10) 32.3조원 → ('25) 70.3조원 (+38조원, +117.6%)

** 학생 1인당 공교육비(천\$, 한vsOECD, '22년): (초·중등) 22.5 vs 13.5 (고등) 14.7 vs 21.4

이러한 교육 환경 변화와 현장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교부금이 생긴 지 반세기 만에 교부금 산정방식이 바뀐다. 앞으로는 국가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되,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소요를 감안해 학령인구 감소는 일부(35%)만 고려*하여 교부금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 안전장치도 하나 더 붙는다. 교부금 총액이 전년 보다 줄어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한다. 교육 현장이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

* 전년도 교부금 × (1 +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) × [1 + (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× 0.35)]

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(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.79%와 교부금 간 차액)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·인재계정 수입으로 계상하여 영유아 및 고등·평생교육, 인재 유치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. 이를 통해 ‘흔들림 없는 교육투자’라는 내국세 20.79% 연동제의 취지를 이어 나가고,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.

박 장관은 이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관련 법안 제·개정 등을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기획예산처	재정혁신총괄과	책임자	과 장	황희정 (044-214-18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영 (jeanghim@korea.kr)
			사무관	박원준 (parkwj777@korea.kr)
			주무관	현민섭 (hms6370@korea.kr)
	미래대응기금 추진단	책임자	단 장	박성훈 (044-214-23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준 (bbakko0@korea.kr)
	지방재정팀	책임자	팀 장	박민정 (044-214-3190)
		담당자	사무관	고병국 (kobk22@korea.kr)
	지출혁신과	책임자	과 장	문상호 (044-214-1870)
		담당자	사무관	양성철 (yg1102@korea.kr)
			사무관	김민준 (minjun9612@korea.kr)
교육부	지방교육재정과	책임자	과 장	권삼수 (044-203-6636)
		담당자	사무관	황예슬 (moeseul@korea.kr)
행정안전부	교부세과	책임자	과 장	지용구 (044-205-3751)
		담당자	사무관	권순현 (kirin161@korea.kr)